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A Study on Analysis of North Korean Market Economy in 2017: focusing on Proportion and its implication

sung-wook Nam

Graduation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요 약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98년은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흉작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1.1%의 성장률을 보인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의 공공배급경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어 인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던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27.1%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7년은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하여 마이너스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여 계획경제가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경제의 비중은 낮아졌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주제어 : 북한 경제, 사회주의 이증경제, 시장경제 비중과 함의

Abstract

Estimating the size of the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n 2017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changes and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form and proportion of informal transactions in North Korea's economy in 2017, when the UN sanctions are in full swing, is also linked to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s a result, in 2017, North Korea's market economy amounted to \$ 79.9 billion, which account for 21.9% of the GNI(GNI: \$ 32.4 billion). The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1998 market economy estimated in the same way. In 1998,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otaled \$ 34.2 billion, accounting for 27.1% of the GNI \$ 12.6 billion in 1998. In short, compared to 20 years ago, North Korea's share of the market economy fell from 27.1% to 21.9%. In 1997, the growth rate was negative 6.5%, and in 1998, it was the worst time that the death occurred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y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eating for four consecutive years. North Korea's public distribution system collapsed, reaching a peak of 27.1%, as the proportion of people supplying goods through the market reached its highest. In 2017, however, although the North Korean economy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3.5%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proportion of the market economy has declined, the planned economy overwhelmed the market economy sector compared with 20 years ago. Although the market economy partially solves the shortage of consumer goods, the planned economic mechanism still well operates and manage the North Korean economy.

Key Words :

North Korean Economy, the Proportion of Market Economy, Plan and Market

* 본 연구는 2019년도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특성화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I. 서론

사회주의 경제를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는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다. 부족 현상은 소비재나 생산재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며, 가끔씩 혹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분명하며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한다.¹⁾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부족의 경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래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 되었다. 부족의 경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요를 축소,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소비자들은 당국의 공급 부족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족 현상에 적응하게 된다. 그들은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도 하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사기 위하여 최고 10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한다.²⁾ 물건 구입이 가능할 때에는 사재기를 시도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당국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적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물자 부족 때문에 현상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³⁾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적경제 활동을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라고 한다.⁴⁾ 비공식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충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간의 괴리를 줄이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자가 소비를 제외하고 북한의 농민시장 및 암시장을 통해 유통된 ‘시장경제 부문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 부문이란 민간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 가격 당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제 영역을 의미한다.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사적 경제활동의 비중에 대한 추정은 계획경제의 작동 기제가 적용되지 않는 규모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경제개혁의 향후 가능성을 진단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 구조와 작동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⁵⁾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⁶⁾

II. 북한의 이중경제 체제: 계획과 시장

-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28~234.
- 2) Zsuzsa·Kapitany·Janos Kornai·Judit Szabo. 1984. “Reproduction of Shortage on the Hungarian Car Market.” *Soviet Studies*. Vol. 36. No. 2.: 236~256. 1989년을 기준으로 동독의 경우 자동차 구입에 차종에 따라 0~17년, 헝가리는 차종에 따라 0~6년, 불가리아는 1~12년, 폴란드는 0~8년, 루마니아는 0~6년을 각각 기다린다.
- 3) 사적인 경제 활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동독, 헝가리 및 폴란드에서는 정부가 제한적인 조건으로 소규모 가족 단위 경제활동을 허용하였다. 둘째,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소규모 농지를 사적으로 개간하는 형태로 북한 농민들의 텃밭 개간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서비스 분야의 비공식적인 사적경제 활동이다. 예를 들어 주택 보수, 상품 및 여객의 수송, 전업농이 아닌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 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83~86.
- 5) 2017년은 북한 당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하는 첫 해였다. 2016년 두 차례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이어 2017년에는 네 차례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있었다. 제7차 UNSCR 2356(2017.6.2), 제8차 UNSCR 2371(2017.8.5), 제9차 UNSCR 2375(2017.9. 11), 제10차 UNSCR 2397(2017.12.22).
- 6)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는 2016년 1월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 직물, 수산물 등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된 탓이다. 2017년을 기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으로 수출입 비중이 각각 93.2%, 95.5%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까지 막히며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 3.5%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대북제재로 인하여 - 4.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2018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결과,” 검색일 2019년 6월. 10일,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북한의 경제체제는 정책 측면에서는 계획경제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부문이 공존하고 있다.⁷⁾ 계획경제는 당국이 가격을 확정해서 고시하는 국영상점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국영상점은 공급 부족으로 주민들의 소비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계획경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농민시장(장마당)이 형성되었다.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부문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제2경제, 이차경제, 암흑경제, 비관측경제, 등록되지 않은 경제 등은 대체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활동 전반을 의미한다.⁹⁾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한정하여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활동, 즉 계획경제 이외의 부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비공식경제와 제2경제(The Second economy)가 사용된다. 제2경제는 소규모의 가족 경영 및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적인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제를 지칭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인 국영 또는 협동농장의 소유 영역을 포괄하는 제1경제(The First economy)에 대비되는 개념이다.¹⁰⁾ 북한의 계획경제 이외의 비공식경제 부문에 대한 연구는 오승렬(1996), 장원태(1996), 김연철(1997), 김영윤(1997), 최수영(1998), 전홍택(1998), 정세진(2000), 남성욱(2000)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최지영(2016)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¹¹⁾

III. 북한의 시장 경제 유형과 작동 형태

1. 농민시장의 진화

북한에서 사적경제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두 가지 형태로 거래된다.

-
- 7) 2019년 4월 개정 헌법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소유제에 한하여 예외를 규정하였다.
- 8)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장마당 경제”, 김동철. 『경계인』 (서울: 예량출판사, 2019), 189-192.
- 9)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경제 부문은 제2경제나 비공식경제라는 용어보다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 부문은 제2경제나 비공식경제라고 표현되는 경제 영역 중에서 시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부분은 계획경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경제나 비공식경제에는 포함되지만 시장경제 부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10) 1971년 Karol에 의해 처음 제안된 제2경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화폐와 소비재가 재분배되도록 자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K. S. Karol,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sman*, June (1971), pp. 8~10). 제2경제의 개념을 보편화시킨 학자는 Grossman이다.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No. 5 (1997), 23-25). 또한 Garbor는 제2경제를 “사회주의 부문에서 고용인으로서가 아닌 주민들이, 합법이나 불법이냐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소득을 얻기 위한 모든 경제 활동, 즉 계획 경제의 생산과 분배 영역 밖에서 소득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Istvan R. Gabor,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The Hungarian Experience," in Feige Edger L.(ed.), *The Underground Econom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39.
- 11) 오승렬. 1996.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1996), 16 장원태. “날로 확산되는 북한의 지하 경제, 『LG 주간경제』, 10. 24(1996), 21-22.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논총』, 제6권 1호 (1997), 192-193.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7-8. 전홍택. 『북한경제논총』, 제4호(1998), 30-32. 정세진. “북한의 지하경제 확산과 지배 구조 변화”, 『통일경제』, 1998년 2월호.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 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13. 남성욱,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2000): 149~215.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6-14호) 등이 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대체로 비공식 경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또는 좁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농민시장을 “협동농장 농민들의 개인 또는 공동 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김일성은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며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될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¹²⁾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적 요소인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를 주민 생활편의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그러나 김일성의 예측과 달리 사회주의 혁명 이후 70년이 지나도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변창 일로에 놓였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였다. 계획경제가 발전할 때에는 농민시장이 위축되었고 계획경제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농민시장이 확대되었다.¹⁴⁾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과 저렴한 가격의 공공배급 정책으로 농민시장을 통한 유통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 계획경제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김일성은 ‘농민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시’를 발표하였고 상설 농민시장 개장이 붐을 이루는 등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활성화 조치가 계획경제의 혼란을 가져옴에 따라 1987년과 1992년에 농민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1일장을 10일장으로 환원시키려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이를 취소하고 1일장을 다시 용인하였다. 특히 1995~1998년 고난의 행군 이후 당국이 배급제를 지탱할 여력이 부족하면서 인민들이 스스로 의식주를 채집에 따라 농민시장을 통한 시장경제의 비중이 급증하였다.¹⁵⁾ 이러한 현실 변화에 따라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시장 경제 부문의 확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에는 이와 반대로 계획 경제 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김정일이 농민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책과 현상이 충돌하는 상반된 움직임도 나타났다. 농민시장은 개설 취지와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공업용품의 암거래 집결소 및 공급지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에 의한 계획경제가 소비재 생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가격 책정 등 결국 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농민시장의 확산을 용인하게 되었다.¹⁶⁾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의 상당 부분을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시장경제는 주민들의 필수 경제 부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¹⁷⁾ 결국 장마당은 모든 소비재가 거래되는 종합시장, 각종 원자재가 조달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제품의 수입물자교류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장마당이 도심과 농촌지역에 정착되어 물자 유통체계의 필수적 일부로 부각되자 북한 정권은

12) 조선로동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출판사, 1983): 465.

13)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367.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여러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

14)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이 시작되면서 당국이 가격 결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까지는 개인 농업 경리, 개인 수공업 경리 등이 모두 협동화 또는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시장이 개설되었다. 1969년 ‘전국상업일군 열성자회의’에서 김일성은 농민시장을 1개 군에 1개소만 개설하도록 하고, 그 동안 1일장을 10일마다 개장하도록 지시하였다.

15)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서울: 문예산책, 1995), 68-70.

16) 리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농민시장 가격의 올바른 조정.”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1998년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98).

17)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37-38.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출처는 첫째,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된 곡물, 둘째,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물품, 셋째, 외교관, 선원 및 시베리아 벌목공 등 해외여행자, 체류자의 반입품, 넷째,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온 밀수품, 다섯째, 계획경제 부문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품 등이다

2003년 이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물려 연간 5,600만 불(610억원)을 징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장마당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정권에게 비교적 안정된 수입원으로서 특특한 효자노릇을 하였다. 북한에는 규모가 2,800평방피트(약 260m²)의 소규모에서 250,000평방피트(약 3,200m²)에 이르는 초대형 장마당들이 산재해 있다. 북한 정권이 연간 50만 불 이상의 세금을 거두는 대형 장마당은 평양, 원산, 함흥, 청진 등 6개소에 이르며, 그 중 가장 큰 원산 장마당은 매년 약 85만 불을 ‘세금’으로 바친다. 장마당들은 석탄, 해산물 및 여타 물자들의 수출산업과 관련된 정교한 공급망(supply chain)과 연계되어 있으며, 최근 다시 조여지는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국영기업과 연결되어 장마당에서 대규모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인들은 ‘돈주(Money master)’라는 명칭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은행과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제활동을 한다. 현재 북한 내에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436개의 장마당이 공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장마당이 한 곳도 없었다.¹⁸⁾ 북한 정권 입장에서 ‘돈주’와 장마당의 부상은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확실한 수입원인 동시에, 북한의 시장경제 확대에 의한 시민사회 출현의 토대로서 북한 당국이 규모와 행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시장경제 부문의 물품 공급 유형

1) 텃밭 등에 의한 농산물 공급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24조는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북한 농촌에서 집단 농업 체제를 벗어난 경작 형태 세 가지는 텃밭, 부업밭 및 경사지 폐기밭으로 텃밭과 부업밭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과 같이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텃밭에는 채소 등의 부식물을 심도록 되어 있으나 농민들은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며, 그 외 콩, 마늘 등 농민시장에서 환금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 작은 채소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소채전’이라고 부르며, 규모는 3인 가족 기준 25평 내외로 30평 미만¹⁹⁾이지만 생산성이 높아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의 20% 이상을 상회한다.²⁰⁾ 폐기밭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함경북도에서는 ‘소토지’라고 부르며²¹⁾ 개울가나 낮은 언덕 등과 같이 버려진 땅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개인 경작 형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식량난 지속에 따라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폐기밭의 생산 규모 역시 적지 않다.²²⁾

18) Victor Cha and Lisa Collins,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August 26, 2018, CSIS, accessed August 20, 2019,

<https://beyondparallel.csis.org/markets-private-economy-capitalism-north-korea/>

19) 북한 전직 외교관 고영환은 개인 텃밭의 규모에 대해 “텃밭은 농가와 농가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일구는데, 집이 드문드문 있는 데는 너비 10m에 길이 50m 되는 곳도 있다. 농장의 밭 중에 그 반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는 데 비하면 굉장히 넓은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고영환, 『평양 25시』 (서울: 고려원, 1992), 58.

20) 탈북난민 1호로 공인된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사 리민복 씨가 농업 연구가로서 직접 시험 해보고 전국 출장으로 돌아온 데 의하면, 개인농에 비하여 집단농의 생산성은 대체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텃밭, 개인 폐기밭(일명 부대기밭, 자류지)의 생산성은 협동 농장 밭보다 3~5배 높다고 주장한다. 대산농촌문화재단 심포지엄 보고서, 『새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 협력』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99), 100-102.

21) 탈북자 최동철은 “다른 데서는 폐기밭이라 부르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소토지라고 부르는 개인 경작지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탈북자 대담”, 『통일한국』, 1996년 4월호: 70.

22) 리민복 연구사는 농장원 한 명이 365일 열심히 일해서 약 180kg 정도를 결산 분배받는데, 일주일에 이를 내지 사흘만 폐기밭

2) 부업 등에 의한 경공업제품 공급

경공업 및 소비재 제품의 비공식 생산은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 과 관련이 깊다.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공장, 기업, 협동농장의 가내 작업반을 확대·개편한 생활필수품 생산증대 운동으로 기관, 기업소, 합동 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 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희 자재와폐기 폐설물, 부산물을 동원 리용하여 만든 국가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한다.²³⁾ 원칙적으로 국영 직매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는 농민시장으로 유통된다.²⁴⁾ 국가계획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어 8·3 인민소비품은 생산 측면에서 제2경제의 측면이 강하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에서 생산하는 8·3 인민소비품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은 당국이 이들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²⁵⁾ 주민들은 “이제는 8·3 인구(개인 물품 제조업자)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은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국영 상업을 대신하여 개인들의 경공업 제품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

3) 밀무역을 통한 공급

땃밭, 폐기밭, 부업밭의 농산물과 8·3 인민소비품 생산은 소비재를 생산 공급하는 국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밀무역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반출된 공식 수입 제품의 국내 암시장 유통은 대외적인 요인이다. 2010년대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14년 76.1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7년도에는 55.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 3차 북핵 실험이후 유엔의 대북제재로 무역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했다. 수출 감소는 생산 요소 수입으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 감소 현상을 통하여 수출 부진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부진으로 인한 외화 획득 감소는 생산 요소 수입 감소로 연결됨으로써 북한 경제는 악순환의 함정에 처해 있다.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다. 북한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액이 전년 58.3억 달러 대비 14.6%(약8.5억 달러) 감소한 49.8억 달러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북한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및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3% 감소한 1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달러 증가한 3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다.²⁶⁾

중국 세관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중국과의 밀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호시무역²⁷⁾을 파악해

에 신경 쓰면 1년에 200kg 정도의 사랑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245-247.

23) 『민주노선』, 1989년 5월 27일.

24) 북한이 공업 관리 체계의 모범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대안중기계의 경우에도 변압기를 제작하여 북한 화폐 단위로 150원에 암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5년 11월호.

25) 최수영. 『북한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28.

26) 중국 해관통계, 2008~17년. 정형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최근 5년간 북중 무역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정형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27)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주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며 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무관세 교역을 의미한다. 2010년 수정된 ‘변경주민 호시무역 관리방법’에 따르면, 북·중 양국 국경선 반경 20km 이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8,000위안 이하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다. 호시무역은 수출입 통계수치에는 잡히지 않은 거래방식으로 얼마나 교역이 이루어지는지 실제 교역량을 확인할 수 없다. 검색일 2019년 5월 4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70619>

야 한다.²⁸⁾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 상당부분 암시장 및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호시무역 지역은 랴오닝성(遼寧省)의 단둥, 지린성(吉林省)의 훈춘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품목은 북한산 골동품과 고급 철제품, 그리고 금, 은, 동 등 희귀 금속 등이다.³⁰⁾ 해외 귀국자들이 중국, 러시아 및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의 상당 부분을 당이나 정부 기관, 또는 직장 상사에게 뇌물로 주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그 물건들을 팔아 외화를 얻는다. 일종의 국영 암시장이 개설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³¹⁾

IV. 시장경제 부문의 규모 추정

1. 시장경제 통계 분석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적경제 통계로는 1961년까지 발표한 소매상품 유통액 중 개인시장 및 농민시장의 비율과 금액이 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해 개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던 모든 상업 활동이 금지되고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국영상업으로 전환되었다. 1959년 이후 소매업의 99% 이상이 국영 또는 협동단체에 의한 경영으로 전환되었고, 사적경영은 1% 미만에 불과했다.³²⁾

북한의 공식 발표 이외에도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추정치가 북한을 방문한 국제기구 지원이나 외국인 또는 탈북자들의 언급을 토대로 하여 간헐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부분적인 추정치만이 발표되었다. 일반 농민의 경공업 제품 구입 시 농민시장 이용 비율은 95%이며 도시 근로자의 경우 식량 소요량의 40~50%는 장마당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연구도 진행되었다.³³⁾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이용 비율은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제시되는데, 탈북자의 탈북 시기 및 지역, 직업 등에 따라 다르다.³⁴⁾

2. 지출 측면에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

북한 시장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필수적인 곡물 및 생활필수품의 총생산 규모와 주민들의 최종 소비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2017년 북한 GDP 추정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일부가 발표한 각종 보도 자료를 근거로 최종 소비 중에서 시장 이용 비중과 관련한 가정들을 전제로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는 북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들의 산업 부문별 최종 소비규모를 추정하는 데 부가가치 생

28) 최장호 외, 『북한의 무역제도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29) 박복선, “북한과의 중국 교역 통로-변경무역”, 『통일경제』, 1999년 11월호, 86-90.

30)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서울: 문예산책, 1995), 73-78.

31) 에야 오사무, 김중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서울: 청정원, 1999), 161-165.

3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1961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서울: 공보처, 1996). 연합통신, 『북한 50년』 (서울: 연합통신사, 1995), 151-152.

33) 동용승(1997)은 북한 국민총생산(GNP)의 15% 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은행이 1995년 북한 경제 규모를 223억 달러로 추정했는데 이 경우 1995년 암시장 규모는 33억 5,000만 달러다.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확산”. 『삼성경제』, 1997년 5월호.

34)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278. 탈북자 고청송, 최명학, 윤웅의 증언에 의하면, 암시장의 구입 비율은 공산품은 80%, 주식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는 60%라고 한다. 김연철, 『북한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48; 소비생활의 95%를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산 총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곡물 부문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일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총생산의 일부를 소비한다.³⁵⁾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제시된 각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에 중간 투입액을 합한 각 산업의 총산출액을 사용하였다. 북한이 생산한 각 산업 부문의 총 산출액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총산출액 등을 이용하여 각 산업의 분배 및 투입 구조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였다.³⁶⁾ 북한 주민들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발표한 농민시장 이용비중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도입하였다.

첫째,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농민시장 및 암시장을 통하여 농림어업 제품, 경공업 제품, 기타 서비스 등 세 가지만을 구입하고 소비한다. 한국은행이 매년 6월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부문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광공업을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으로, 서비스 부문을 정부와 기타로 재분류하여 총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있다. 결국 첫 번째 가정은 여덟 가지로 구분되는 북한의 산업 부문 중에서 세 가지 부문의 제품만을 농민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⁷⁾

둘째, 일반 주민들은 농림어업 제품의 60%, 경공업 제품의 70%를 시장을 통하여 소비한다. 이는 주곡의 60%, 생활필수품의 70%를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통일부 자료와 탈북자 증언을 일부 변형하여 주곡을 농림어업 제품으로, 생활필수품을 경공업 제품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일반 주민은 북한 전체주민의 85%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농민시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상류층과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만이 농민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가정이다.³⁸⁾

우선 최종소비 규모를 추정하고 기본 가정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소비하는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농림어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농림어업 제품과 경공업 제품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 마진과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부문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1) 구체적인 추정 방법

35)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르면 생산, 지출, 분배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 국민소득이 모두 일치한다. 이 법칙은 한 나라의 국민 소득 총액에 대한 원칙이지 개별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각 산업 부문의 최종 소비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총산출액(부가 가치+중간 투입)을 사용해야 한다.

36)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서울: 한국은행, 1987), 18.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행)은 각 산업 부문 생산물의 판매, 즉 배분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 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수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라 하고, 총수요에서 수입을 빼면 총산출이 된다. 따라서 총산출과 수입을 합하면 총공급이 된다. 총공급(총산출액+수입액) = 총수요(최종 수요+ 중간 수요).

위 식에서는 최종 수요는 민간 및 정부의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최종 소비(C), 민간 및 정부 고정 자본 형성과 재고 증가를 의미하는 투자(I) 및 수출(X)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총공급) $Q_i + M_i =$ (총수요) $C_i + I_i + X_i = D_i$

단, Q_i : i산업의 국내총산출(부가가치생산+중간투입), M_i : i산업의 수입, C_i : i산업의 최종 소비, I_i : i산업의 투자, X_i : i산업의 수출, D_i : i산업의 중간 수요 위 식은 다 음과 같이 변형된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산업 생산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최종 소비(C_i)를 추정할 수 있다. $C_i = Q_i + (M_i - X_i) - I_i - D_i$

37) 광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 서비스 등은 주민들이 소비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여타 산업 부문에서 생산된 제품도 시장을 통하여 일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숫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8) 북한에는 경제난 또는 식량난에 관계없이 전액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10%에 해당되며, 북한의 현역 군인은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128만 명이다.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대전: 통계청, 2018).

(가)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

북한의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의 시장 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산업 제품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산업의 총산출액(Q), 순수입액(M-X), 투자액(I), 중간 수요액(D)을 추정해야 한다. 총산출액(Q)은 한국은행의 『2017년 북한 GDP 추정 결과』에서 발표된 부가가치 생산액에 중간 투입액을 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각 산업별 총생산량을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총생산량에 남한의 가격과 부가 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를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북한의 부가가치 생산액 이외에 중간 투입액 및 총산출액 추정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총산출액을 한국은행의 북한 국내총생산(GDP) 추정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총산출액과 경공업 부문의 총산출액을 각각 73.9억 달러(전체 산업대비 22.8%), 22억 달러(전체 산업대비 6.8%)로 추정하였다. 순수입액(M-X)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대북 반출입 및 수출입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KOTRA가 발표한 「2017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통계를 토대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추정된 농림어업 제품 순수입액은 - 55.4백만 달러³⁹⁾, 경공업 제품의 순수입액은 1.1억 달러⁴⁰⁾이다.

한편,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에서의 투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소비하는 세 가지 부문이 대부분 소비재로서 투자되는 부분은 크지 않으며 북한에서는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재고의 증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의 투자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¹⁾ 중간 수요액(D)은 각 산업의 총산출과 수입을 합한 총공급($Q_i + M_i$) 중에서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서 중간재로 사용된 부분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중간 수요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 북한 경제 수준과 유사한 시기의 남한의 중간 수요율⁴²⁾을 사용하여 북한의 중간 수요액을 추정하였다. 2017년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1,295달러로 남한의 1978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GNP; 1,398달러)에 근접하므로 이 시기 남한의 중간수요율(농림어업 부문 30%, 경공업 부문 40%)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북한의 중간 수요액은 농림어업 부문 22.2억 달러, 경공업 부문 8.8억 달러이다.⁴³⁾ 북한의 최종 소비규모(C)는 농림어업 부문 50.5억 달러, 경공업 부문 8.8억 달러가 된다.

<표 1> 지출 측면에서 최종소비 규모 추정 결과

(단위: 억 달러)

구분	총산출액(Q)	순수입(M-X)	중간 수요(D)	최종소비 (Q+(M-X)-D)
농림어업	73.9	-0.6	22.8	50.5
경공업	22	-2.9	14.6	8.8

39) 총수입(백만 달러): 202.6=(곡물 이외의 수산물 및 기타 농산 실물제품 170 + 곡물 32.6) 수출(백만 달러): 258=((곡물 이외의 수산물 및 기타 농산 실물제품 257.8 + 곡물 0.2) 순수입액 - 55.4(백만 달러)

40) 수입(백만 달러): 485.1=(플라스틱 233.7 + 의류와 섬유 204.7 + 신발류 41.2 + 종이 2.3 + 가죽제품 1.5 + 비누세제 0.2 + 화장품류 1.3 + 기타 0.2), 774.2=(플라스틱 10.5 + 의류와 섬유 567.9 + 신발류 41.2 + 종이 66.1 + 가죽제품 8.5 + 비누세제 15 + 화장품류 8 + 기타 57)

41) 정부 소비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일반 주민을 전체 주민의 85%라고 전제한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정부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2) 중간 수요율은 총수요액(=총공급액, $Q_i + M_i$) 대비 중간 수요액(D_i) 비율을 의미하며, 중간 수요액은 총공급액(=총수요액)에 중간 수요율을 곱한 금액임.

43) 농림어업 중간수요 22.8(억 달러): =(총산출액 73.9 + 총수입 2) × 중간 수요율 30%. 경공업 중간수요 14.6(억 달러): =(총산출액 31.6 + 총수입 4.9) × 중간 수요율 40%.

이렇게 추정된 북한의 최종 소비 규모에 기본가정을 적용하면 북한의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의 시장 규모는 총 54.8억 달러(농림어업 부문 40.6억 달러, 경공업 부문 14.2억 달러)로 추정된다.

<표 2> 지출 측면에서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 시장경제 규모 추정

구분	최종소비(A)	시장이용 비중(B)	일반 주민비율(C)	시장경제 규모 (A×B×C)
농림어업	79.6 (억 달러)	60%	85%	40.6 (억 달러)
경공업	23.9 (억 달러)	70%	85%	14.2 (억 달러)

(나) 서비스 부문

북한에서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기타 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음식 및 숙박, 주택 임대 등의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기타 서비스 부문의 규모 추정은 농림어업이나 경공업 부문의 시장 경제 규모 추정과 같은 간접비교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포함된 기타 서비스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통신업 및 주택 소유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일부 발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60~70%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시장경제 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운수·통신 서비스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만으로 제한하였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과 운수·통신 서비스 총액은 시장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 마진 또는 화물 운임과 통신요금을 의미한다. 북한의 시장경제에 포함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과 운수·통신 서비스 규모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 제품 규모에 상업마진율과 화물·통신 운임률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상업마진율과 화물·통신 운임률은 중간 수요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1978년의 상업 마진율과 화물·통신 운임률⁴⁴⁾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농림어업 제품과 경공업 제품의 거래에 따른 도·소매 및 음식·숙박과 운수·통신 서비스 거래 규모는 각각 4.5억과 3.8억 달러가 되었다.⁴⁵⁾ 시장을 통하여 소비되는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 규모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 시장규모 추정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약 1.7억 달러로 추정된다.⁴⁶⁾

2) 추정 결과 종합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는 총 70.9억 달러로 2017년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어업이 40.6억 달러로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의 12.5%이며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다. 역시 주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경공업은 14.2억 달러로 GNI 대비 4.4%, 시장경제 비중대비 20%이다. 한편 서비스 부

44)농림어업 11% (상업마진율 15%, 화물·통신 운임률 10%). 경공업 21% (상업마진율 19%, 화물·통신 운임률 11%).

45)농림어업 10.3(억 달러) = 시장규모 40.6 × 상업 마진 및 화물·통신 운임률(25%). 경공업 4.3 (억 달러) = 시장규모 14.2 × 상업 마진 및 화물·통신 운임률(30%).

46)음식·숙박업 등의 수출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998년 북한에서 생산된 음식·숙박업(주거) 등의 총산출액은 3.2억 달러, 동 서비스 항목의 1978년 남한의 중간 수요율 8%를 감안하여 계산한 중간 수요액은 약 0.3억 달러로 추정된다. 최종 소비는 2.9억 달러이며 시장이용 비율 70%, 일반주민 비율 85%를 적용한 결과 시장경제 규모는 1.7억 달러다.

문은 16.1억 달러로 GNI 대비 5%, 시장경제 비중대비 23%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먹는 문제와 일부 주거는 물론 경공업 제품의 부족 현상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현상을 시사한다.

<표 3> 지출 측면에서의 시장규모 추정 결과

구분	최종소비 (A, 억 달러)	시장이용 비중(B, %)	일반 주민비율 (C, %)	시장경제규모 (A×B×C) (억 달러, 시장경제 비중)	GNI 대비 시장경제 비중(%)
농림어업	79.6	60	85	40.6(57%)	12.5
경공업	23.9	70	85	14.2(20%)	4.4
서비스	27	70	85	16.1(23%)	5
음식·숙박(주거)	2.9	70	85	1.7	0.4
	상업마진 등			14.6	
	(농림어업)			(10.3)	
	(경공업)			(4.3)	
합계				70.9	21.9

3) 시장경제 부문의 물품 공급 출처별 규모 추정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은 2017년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70.9억 달러)를 점유한다. 시장경제 부문에 공급되는 물품의 출처는 다양하지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①텃밭 및 경사지 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 ②중국 등과의 밀무역, ③가내 부업, ④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이 네 가지 출처의 시장 공급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북한 농민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추정된 전체 시장경제 규모에 대한 검증 을 한다.

(1) 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

본고에서는 북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텃밭 등에서 생산된 곡물의 30%가 시장에서 유통된다는 가정 하에 거래량을 추정하였다. 2016년 4월의 보고서⁴⁷⁾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은 594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고, 이 중에서 경사지와 텃밭의 생산량은 27.5만 톤으로 4.6% 수준이다. 2014년은 전체 생산량 541만 톤에서 경사지와 텃밭 생산량은 27.8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5.1% 수준이다. 경사지와 텃밭 등에서 생산되는 규모는 전체곡물 생산량의 5% 수준이다. 2019년 5월의 보고서도 유사한 생산량을 제시했다.⁴⁸⁾ 북한이 제출한 사적 생산의 규모는 국제 간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수치라고 판

47) 2016년 4월 27일 발표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October)’.

48) 2019년 5월 발표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ay 2019. <http://www.fao.org/3/ca4447en/ca4447en.pdf>.

단된다. FA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가구당 평균 텃밭 면적이 농촌 가구는 95m², 도시 가구는 30m²인 것으로 가정하고 농촌 및 도시 가구 수를 감안 하면 북한의 텃밭 규모는 총 2만 5,040ha로서 북한 총 경지 면적(2016년 기준 197.2만ha)의 1.3% 정도로 계산되며, ha당 생산량은 옥수수의 경우 3톤이다. 경사지 면적은 55만 ha로서 전체 면적의 28% 수준으로 생산성은 0.4톤이다.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조선자료』에 게재된 논문 “최근의 농민시장에 관한 정책 동향과 경제이론연구”⁴⁹⁾에서는 가구당 평균 텃밭 면적, 총 가구 수, m²당 평균 생산량을 모두 곱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북한의 텃밭 생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텃밭에서 옥수수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생산 가능 규모는 약 15만 톤(총 곡물 생산량의 약 3.9%)이라고 추정하였다. 북한에서 옥수수의 최고 생산량은 ha당 약 10~15톤이라고 증언한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리민복의 주장 등을 볼 때 텃밭에서의 생산량은 다소 과소평가되었다. 텃밭의 평균 생산성이 협동농장의 4.4톤(옥수수) 보다 낮은 것은 당국의 세금 부과 등을 감안하여 농민들이 자가 생산량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사지와 텃밭 등에서의 곡물 생산 비중(5~15%)이 곡물 이외의 농림어업 생산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을 위한 농림어업 생산 규모는 4~12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며,⁵⁰⁾ 이 중에서 30% 정도가 직접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된다고 가정할 경우 거래규모는 1.2~3.6억 달러로 추정된다.

(2)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유입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물품은 대부분 밀무역을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곡물의 경우에는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은 곡물 중 일부가 유출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중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실제 중국산 상품의 비중은 각종 증언에서 나타난 중국산 상품의 비중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소비되는 중국산 경공업의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주장⁵¹⁾도 있었으나 실제 확인에는 한계가 있고 일부 제품이나 시기적으로 한정되고 북한 당국도 김정은 집권 이후 국산화를 강조하는 등의 이유로 비중은 다소 낮게 기정하였다.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의 비중을 농산물은 장마당 유통 물품의 30%, 공산품은 50%라고 가정하였다. 중국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어 북한 시장에 공급되는 규모는 농림어업은 30%, 경공업 부문은 50% 비중으로 농림어업 부문은 12.2억 달러, 경공업부문은 7.1억 달러로 총 19.3억 달러다.⁵²⁾

KOTRA가 중국 해관통계를 인용, 발표한 2017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21.8억 달러, 수출은 2.1억 달러에 불과하여 무역적자가 19.7억 달러 규모다. 중국 해관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밀무역이나 친인척 간의 증여 물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밀무역 물품의 규모를 19.3억 달러라고 추정한 것은 비공식 유입에 의한 시장 규모를 과대 추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중국 해관통계는 중국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데 반하여 본 논문의 추정치는 우리나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

49) 文浩一, “最近の農民市場に關する政策動向と經濟理論研究”, 『月刊朝鮮資料』, 朝鮮問題研究所 編, 1999년 2월호.

50) 농림어업 총산출액(79.6억 달러) × 텃밭 등에서의 생산 비중(5~15%) = 4~12억 달러.

51) 북한에서도 수입대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80~90%가 중국산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북한 내부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국산화’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북한의 수입대체 노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2014년 신년사에서부터 본격화됐다. 김 위원장은 이 신년사에서 “경공업 공장에서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0월, 1981년 이후 35년 만에 열린 노동자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낚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수입병(病)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고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훈, ‘내 고향’ ‘은하수’… 北, 수입대체 국산화에 총력, 『마이더스』 2017년 2월호.

52) 농림어업 부문 시장 규모(40.6억 달러) × 중국 상품 비중(30%) = 12.2억 달러.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14.2억 달러) × 중국 상품 비중(50%) = 7.1억 달러.

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가내 부업

북한 주민들은 가내 부업으로 농림어업 제품, 경공업 제품 등을 생산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가내 부업을 통한 경공업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의해 조직된 직장 내 부업반에서도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국가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해야 하며, 시장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업반에서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일종의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로 보고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시장경제 부문의 서비스 제공은 모두가 가내 부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 부문의 시장 규모 16.2억 달러를 모두 가내 부업에 의한 서비스로 보았다. 물론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비밀비재다. 이는 일종의 계획 경제로부터의 노동력 유출이므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가내 부업보다는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이라고 분류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가내 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따른 부업반에서 생산된 경공업 제품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 생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내 부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하는 부분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내 부업으로 생산되는 경공업 제품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공업 제품 총액의 10% 이내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가내 부업은 주로 주부들의 식료품 생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신의 기술로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농민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부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부업에 의한 생산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부업 생산의 증대 속도가 시장 경제 부문이 확산 속도보다 늦어 시장의 부업 상품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의 시장 공급 규모는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의 10%인 약 1.4억 달러가 된다.⁵³⁾ 서비스 분야의 16.2억 달러를 합하면 총 17.6억 달러가 된다.

(4) 기타

기타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은 경사지와 텃밭 등에서의 생산, 중국으로부터의 비공식 수입, 가내 부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따라 생산된 물품,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 상류층의 잉여분, 분조의 초과 생산물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 형태가 포함된다. 8·3 인민 소비품의 총유통액은 경제난이 악화되기 전인 1995년 북한 국영 상업망 유통액의 10% 수준⁵⁴⁾이었으나 1996년 이후 정부의 국영 상업망을 대신하여 비중이 증가하였다. 주로 공장, 기업소에서 권력 등을 이용하여 빼돌린 물품이 농민시장에서 은밀히 유통된다. 물품을 빼돌리는 불법적인 사취에는 기관, 기업소와 같은 조직의 사취와 개인의 사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타 경로에 의한 시장 공급 규모는 별도의 계산이 곤란하여 위에서 추정한 시장 경제 부문의 총 규모(농림어업 40.6억 달러, 경공업 14.2억 달러, 서비스 16.1억 달러)에서 위의 세 가지 공급 출처에 물품 공급 규모를 차

53)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14.2억 달러) × 가내 부업 비중(10%) = 1.4억 달러.

54)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서울: 공보처, 1996), 101-102.

감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기타 경로에 의한 농림어업 제품 공급 규모는 텃밭 등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된 농림어업 제품(1.2~3.6억 달러)과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 규모(12.2억 달러)를 제외한 24.8~27.2억 달러가 되며, 기타 경로에 의한 경공업 제품 공급 규모는 개인 가내부업(1.4억 달러)과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5.7억 달러)을 제외한 14.2억 달러 내외가 된다.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70.9억 달러)를 네 가지 공급 출처별로 추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의 <표 4>와 같다.

<표 4> 시장경제 부문의 물품 공급 출처별 규모 추정

(단위: 억 달러)

	텃밭, 경사지	밀무역	가내 부업	기타	합계
농림어업	1.2~3.6	12.2	-	24.8~27.2	40.6
경공업	-	7.1	1.4	5.7	14.2
서비스	-	-	16.1	-	16.1
합계 (비중)	1.2~3.6 (평균 3.3%)	19.2 (27%)	17.5 (25%)	30.5~32.9 (평균 45%)	70.9

V. 추정 결과의 함의와 시장경제의 기능

1. 추정 결과의 함의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의 규모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⁵⁵⁾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98년은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흉작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마이너스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공공 배급경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어 인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던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27.1%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7년은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제재로 인하여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여 계획경제가 시장경제 부문을 압도함에 따라 비중이 낮아졌다. 시장경제 규모가 1998년 34.2억 달러에서 2017년 70.9억 달러로 2배 증가했지만 북한경제의 총규모는 126억 달러에서 324억 달러로 2.6배 증가하여 시장경제의 증가세가 명목 국민 총소득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의 계획경제 증가세가 시장경제 증가세를 압도하여 상대적으로 2017년 시장경제의 규모가 1998년보다 축소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시장경제는

55) Komai(1992)에 의하면 계획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베트남은 1987년에 71.4%, 유고슬라비아는 1987년에 86.5%, 폴란드는 1988년에 81.2%로 추정했다. 따라서 시장경제 부문 27.1%를 제외한 북한의 72.9%는 1987년의 베트남 71.4%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적 부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비중은 1988년의 동독 88%, 1988년의 불가리아 95.9%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내각경제, 군수경제, 궁정경제와 함께 북한의 4대 경제 축을 형성하고 있다.⁵⁶⁾

일반적인 통념은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장사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는 장마당과 노동당, 2개의 당이 있다'란 말이 나돌 정도로 장마당은 이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증언했다.⁵⁷⁾ 김정은의 현지도로 경제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특구 등 다양한 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시장경제가 확대되어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부 인식은 북한경제에 대한 착시현상이다. 심지어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이 진정한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되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유치를 위한 개혁 개방 정책이 북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2년 집권이후 2017년 10월말까지 총 896회의 현지도를 했다. 이중 경제 분야가 308회로 33.4%, 군사 분야가 299회로 33.4%를 차지했다. 이외에 정치 분야 15.3%, 사회문화 14.8%, 대외 및 기타분야가 2.1%다. 군사 분야보다도 역점을 둔 것이 경제 분야로서 김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현지도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영도자의 빈번한 현지도가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가 여부다. 최고 지도자가 현지도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양적(quantitative) 접근방법이며 노동집약적 발전전략이라는 것이 헝가리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등에서 오랜 기간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을 강의한 코르나이(J. Kornai) 교수의 지적이다.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에서도 모든 산업현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이외에 자본과 기술을 확충하는 질적인(qualitative)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 지도자가 시장경제를 허용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보다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내지 강화함으로써 지난 1997년과 비교하여 시장경제 부문이 역설적으로 위축되었다.⁵⁸⁾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 경제는 지난 1998년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과 비교하여 안정을 찾았다. 북한 경제는 2016년 5월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확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⁵⁹⁾ 북한은 2018년 4월 2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⁶⁰⁾ 2018년 7월 3일자 『노동신문』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건설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경제건설의 소프트웨어는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 현대화 및 정보화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달성하여야 할 미시적인 목표는 △식량 자급자족, △에너지 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 △무역구조 개선, △경제개발구 자본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다. 이외에 '남한과의 경험을 통한 경제건설'이 새롭게 추가

56) 1998년 이근모 정무원 총리가 김일성에게 불려가 “계획경제(제1경제)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대해 왜 그런가”라는 질책을 받고 “우리나라에게는 4개의 지갑이 있다. 김일성 주석의 지갑, 김정일 서기의 지갑, 군부의 지갑 그리고 정무원의 지갑이 있다. 앞의 3개가 우선 채워지고 정무원의 지갑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임되고 연형묵으로 교체되었다. 예야 오사무·세키가와 나쓰오 편, 김종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서울 : 청정원, 1999), 155.

57) “변화의 발원지 장마당. 380개 장마당엔 "없는 게 없다"... 위안화·달러화 유통북한판 자본가 '돈주' 출현... 젊은 층엔 개인주의 성향.” 『연합뉴스』, 2015년 11월 10일.

58) 남성욱, “한 손엔 외자유치, 또 한 손엔 공포정치 마른 수건도 쥐어짜다!,” 『월간중앙』, 2018년 12월호.

59)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국가의 굵직한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한다. 1956년 4월 개최된 3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1961년 9월 4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집권시대 들어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과거의 정책이 경제발전에 대한 계획인데 반해 ‘전략’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색이다. 구체적인 각 부문별 생산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 부문과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여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계획을 세웠다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경제 관료는 물론 최고 지도자까지 곤욕을 치른 과거를 고려하여 ‘전략’이란 수단 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60) 새 전략노선의 해석을 둘러싸고 남한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논란이 있었다. 핵무기 개발은 상수(常數)로서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북한식 경제 돌파구 전략을 표방한 것인지? 혹은 이미 핵개발은 성공했으므로 이제 핵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각종 자재와 재원을 순수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인지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될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건설의 전략이 지난 1997년의 고난의 행군시절의 경제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시하기 어려운 목표와 장기계획이 공개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가 투자 부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이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계열적으로 판단할 때 2017년은 1998년보다 안정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2015년 마이너스 1.1%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⁶¹⁾ 2017년 하반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그물망 제재와 압박으로 마이너스 3.5%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재 이행이 시장경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 등으로 장마당에 공급되는 물자가 감소하여 시장경제가 위축된 측면이 강하다.⁶²⁾ 특히 2013년 이후 4차례 진행된 핵실험과 수 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은 군수경제의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북한 경제가 국가주도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2019년 개정헌법 서문에서 밝힌 핵보유국과 무적의 군사강국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군수경제 및 당경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내각 중심의 일반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식량생산 및 소비재 산업이 지나치게 부진하여 인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추정결과 농림어업 부문의 시장경제 규모가 전체 규모대비 12.5%로 제일 비중이 크다. 여전히 먹는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공공배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생산이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1년 치 식량을 전부 배급해 주지 못하고 60%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나누어준다. 이 정도의 식량으로는 아무리 절약해도 5개월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⁶³⁾ 따라서 주민들은 장마당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공업 부문이 전체 경제 규모의 4.4%를 차지하는 것도 소비재 산업의 부진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선적으로 소비재 생산이 위축된다. 군수공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경공업 소비재 생산의 부진을 가져온다.

2012년 6·28 조처나 2014년의 5·30조처가 발표되었지만 현장에서 어떤 중국식 개혁의 조짐은 부재상태다. 2019년 4월 개정헌법에서 청산리와 대안의 사업체제 등 김일성 시대의 현지도 원칙 삭제 등 시장 경제적 요소의 일부 수용 움직임과 동시에 계획 경제 체제의 재건 노력이 동시에 상호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장경제 체제를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둘째, 시장경제 체제의 수용은 일시적 현상이며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경우 시장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셋째, 최근 북한의 변화는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 체제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도다. 당국의 상호 모순적인 조치는 현재진행형으로 객관적인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의 조치는 북한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고수하려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2. 시장경제의 역할과 한계

61)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 2015년 - 1.1%, 2016년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62) 노동당 39호실 산하 경흥지도국 당위원장 리철호는 북한 노동당 대내 기관지인 『근로자』(2017년 12월호)에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이라는 기고문에서 제재로 인해 노동당 39호실의 외화벌이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유류 공급 제한으로 주유소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1월 3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했다”고 미국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63) 법륜, 『통일로 가는 길』(서울: 정토출판, 1999), 122-123.

시장경제 부문 확산의 파급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난다.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은 계획경제 부문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과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휴 자원의 활용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시장경제 부문은 계획경제 부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유휴 인력 및 자재, 폐품 등을 활용하여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많은 인력이 유휴화되어 있다. 유휴 인력은 텃밭 경작이나 개인 부업을 통하여 농산물과 기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각종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재 부족 문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부업이나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생활필수품을 보충하고 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지방의 물품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 판매하는 보따리 장사꾼들에 의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은 먹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급자족적 지역자립 체제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⁶⁴⁾

하지만 시장경제 부문을 통한 생산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사지나 텃밭의 경우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대 및 개인부업 역시 생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경사지나 텃밭 생산 및 개인부업의 경우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윤의 대부분이 소비에 사용되고 있다. 결국 장마당의 확대는 소비재 부족 문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물자부족 문제 자체를 해소하기보다는 지역 간 물자 재분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대부분이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에 의해 공급된 것이니 만큼 농민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정상적인 일상 소비재 생산 활동을 저해하며, 텃밭의 무리한 개간으로 인한 환경 파괴,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 경제 외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 부문 확산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 의식을 변화시켰으며,⁶⁵⁾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사적 자율화(privatization)'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이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와 비교해볼 때 그 방향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변화의 강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북한의 이러한 가치 의식의 변화가 체제 저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통치체제의 특성상 무리가 있다. 일부 '돈주' 들의 대규모 경제활동이 과거보다 부각되는 측면은 있으나 역시 계획경제의 틀에서 관료들과 연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마당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 의식 변화는 반체제적 저항 의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단순한 물질적 실용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북한경제는 군수경제, 내각경제, 당경제와 시장경제의 4중(重)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난이 악화될 때마다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계획경제의 보호막에서 밀려났다. 그들은 부족한 물자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부업에 불과하였던 사적생산과 거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수단이 되었으며, 주민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사적인 생산에 주력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를 습득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농민시장과 암시장이라는 유·무형의 장소에서 사적

64)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77-79.

65) “北 집안일보다 나랏일 더 중요...나라 어려움 먼저 생각해야.” 『노동신문』, 2019년 9월 26일. 노동신문이 국사 우선을 주문한 것은 북한 경제를 사실상 지배하는 시장화 속에서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가 확산하는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 상행위를 하면서 물자 부족을 해결하고, 계획경제의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21.9%를 차지하는 시장경제의 비중이 향후 증가할 것인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 개혁·개방이 되지 않는 한 비공식 부문으로서의 시장경제는 당국의 단속 여부에 따라 확산과 축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부문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계획경제 부문을 더욱 위축시켜 정치체제의 변동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인민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정치적 통제로 한계가 있다. 특히 4중 경제구조에서 시장경제의 비중은 여전히 25% 미만에 그치고 있어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당국이 아닌 시장이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민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공급자의 시장(Seller's Market)이 아니라 수요자(Buyer's Market)와 공급자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갑과 을의 관계를 수시로 조정하며 병존하는 시장이다.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를 습득시키고 당국없이도 생존하는 법을 학습시키고 있다. 과거 북한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경제가 북한 경제 전체의 50%⁶⁶⁾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대북제재가 작동될 시점의 북한의 경제비중은 군수경제 35%,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공정(당)경제 25~30%, 순수한 내각에서 움직이는 인민경제 20% 및 장마당경제 15~20% 라고 탈북자들이 추정했다.⁶⁷⁾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장마당 시장경제는 본고에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정결과인 21.9%와 근접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곽복선. “북한과의 중국 교역 통로-변경무역.” 『통일경제』, 1999년 11월호.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9.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5년 11월, 1999년 9월.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주민이 증언한 북한 이야기』. (www.nis.go.kr).

김경일. “북한의 농장실태와 농민생활.” 『통일한국』. 1999년 8월호.

김동철. 『경계인』. 서울: 예담출판사, 2019..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김성철. “탈북자 대담 북한의 지방공업.” 『통일경제』. 3월호(1999).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경제논총』. 제6권 1호(1997).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2권 1호(1999).

-----,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과정 편.” 『북한연구』. 제2호(2001).

-----, “한 손엔 외자유치, 또 한 손엔 공포정치 마른 수건도 쥐어짜다!” 『월간중앙』. 2018년 12월호.

66) 일본의 다마키 모토이(玉城素)는 북한을 일반 경제, 군사 경제, 당 경제, 지하 경제의 4중 경제라고 정의하고, 군사 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의 5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에야 오사무·세키가와 나쓰오 편. 김중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서울: 청정원, 1999), 161-165.

67) 탈북자들 "北공정경제도 돈줄 막혀 허덕" 『조선일보』, 2018년 3월 18일자.

농정연구포럼. 『남북경제공동체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서울: 농정연구포럼, 2000.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확산.” 『삼성경제』. 1997년 5월호.

대산농촌문화재단 심포지엄 보고서. 『새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협력』.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99.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년도

법륜. 『통일로 가는 길』. 서울: 경도출판, 199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기능과 한계” . 『통일연구논총』. 제5권 (1996).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서울: 문예산책, 1995.

이효근. “중국·북한 경제관계의 변화 전망과 대책,”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 (1999).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통일경제』. 9월호 (1999).

에야 오사무. 김중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서울: 청정원 1999.

연합통신. 『북한 50년』. 서울: 연합통신사, 1995.

장용훈, 『마이더스』 서울: 연합뉴스, 2017년 2월호.

장원태. “날로 확산되는 북한의 지하경제.” 『LG 주간경제』. 1996. 10. 24.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의 실태와 전망” . 『북한경제논총』. 제4호 (1998).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 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 “북한의 지하경제 확산과 지배구조 변화” . 『통일경제』. 2000년 2월호.

정형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최근 5년간 북중무역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 .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좋은 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 싶소』. 서울: 정토출판, 1999.

최동철. “탈북자 대담.” 『통일한국』. 1999년 4월호.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6-14호] , 2016년 11월.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2018.

통일부. 『2000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2001.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한국비교경제학회. 1997. 『비교경제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7.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 해설』. 서울: 한국은행, 1987.

한국은행. “2018년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결과,” 검색일 2019년 6월. 10일,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서울: 공보처, 1996.

『연합뉴스』, 2015년 11월 10일.

『조선일보』, 2018년 3월 18일.

북한문헌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1961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리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농민시장 가격의 올바른 조정.”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1998년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98.
- 리철호.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 『근로자』, 2017년 12월호.

- 『노동신문』, 1999년 6월 1일.
- 『노동신문』, 2018년 7월 3일.
- 『노동신문』, 2017년 11월 3일.
- 『노동신문』, 2019년 9월 26일.
- 『민주조선』, 1989년 5월 27일.

해외문헌

- Dallago. Bruno. *The Irregular Economy : The Underground Economy and Black Labor Market*. Aldershot. England: Gower, 1990.
- Eberstadt. Nicolas.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 *Foreign Affairs*. Vol. 76, No. 2 (1997).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DPRK". November (1997, 2016).
- FAO/WF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ay 2019. <http://www.fao.org/3/ca4447en/ca4447en.pdf>
- Feige. Edger L.(ed.). *The Underground Economies*.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Gabor. Istvan R. "The Second(Secondary) Economy : Earning Activity and Regrouping of Income Outside the Socially Organiz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conomica*. Vol. 22. No. 3~4 (1979).
- Gabor, I. R.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the Hungarian experience".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9.
- Hirschman. Albert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Syste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 Karol. K. S.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sman*. June 1997.
- Kapitany. Zsuzsa. Janos Kornai & Judit Szabo. 1984. "Reproduction of shortage on the Hungarian car market" . *Soviet Studies*. Vol. 36. No (1984).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ee. Choon-Kun. "Outlook for North Korea in 1996 : Survival or Collapse". *East Asian Review*. Vol. 8. No. 1 (1996).
- Sakai. Takashi.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 of North Korean Ideology."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5 (1996).

Snyder Scott. "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the Korean."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June 1998.

Suh Jin-Young. "North Korea's Political Crisis and Four Scenarios regarding the Process of Changes." *East Asian Review*. Vol. 9. No.2 (1997).

Victor Cha and Lisa Collins,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August 26, 2018, CSIS, accessed August 20, 2019,
<https://beyondparallel.csis.org/markets-private-economy-capitalism-north-korea/>

文活一. "最近の農民市場に關する政策動向と經濟理論研究". 『月刊朝鮮資料』. 朝鮮問題研究所 編 .1999년 2월호.

